

민주연구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 주택·주거 기반 확보부터'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4월 7일(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 주택·주거 기반 확보부터』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이제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돌봄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가동되어 국민의 큰 기대가 있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과 집을 중심으로 건강하게 나이가 들며 생활(AIP, Aging in Place)이 가능한 체계가 구축되려면 확보되어야 할 몇 가지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브리핑은 이번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시급하게 확보되어야 할 돌봄 관련 주택·주거·예산 부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이후 확보해야 할 정책 부문에 중점을 두어, 돌봄을 담을 공간, 지원 체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시급한 예산을 제안했다.
- 첫째, 기존 돌봄 주택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 사업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기에 규모도 작았고 공급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향후 시도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중 돌봄 주택으로 적정 비율을 우선 배정하고 단기적으로 기존 주택 재고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둘째, 기존 돌봄 정책은 주택 공급 자체에 무게가 실려 있었고 이에 비해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욕실 개선 등 생활밀착형 주거 지원은 낮은 수준으로, AIP를 추구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본 취지를 달성하려면 시군구에서는 적은 예산으로도 바로 실행 가능한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

했다.

- 셋째, 통합돌봄 재정이 아직 여러 제도와 재원에 분산되어 별도 기금이나 안정적 재원 장치도 부족하기에 주택·주거를 포함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며, 기존 공모 중심의 한시적 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상시적 재정 구조를 갖추기 위해 시민사회가 제안한 돌봄기금과 특별회계 논의도 본격 검토한다고 제언했다.

- 민주연구원 박동욱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브리핑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 제시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